

광우병 파동을 통해 본 한국사회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윤석민** · 조경민***

본 연구는 2008년 봄에 발생했던 미 쇠고기 광우병 논란 사태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양태를 고찰한다. 먼저, 광우병 논란이 발생했던 시점부터 시작하여 문제가 대중적으로 점화되면서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거대한 국민적 소요로 발전되는 과정과 이후 촛불시위가 소멸되기까지 각 시기마다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 및 정부의 대응을 기술하고, 이와 관련한 미디어의 반응, 시민의 동향, 그리고 PD 수첩의 왜곡보도와 관련한 공방을 함께 살펴보았다. 광우병 사태가 야기한 수많은 논란과 사회적 파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과학 정보가 공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되는 양태를 모형화하고 이를 광우병 사태에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소통 대상으로서 광우병 이슈가 가진 특성, 광우병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했던 정보원들과 미디어의 특성, 또한 중개자와 일반 공중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각각 짚어봄으로써 과학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았다.

주제어: 과학 커뮤니케이션 모델, 광우병 위험, 광우병 공포, 촛불시위, PD 수첩, 과학지식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기획연구과제 “한국 민주주의 평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촛불집회 국면을 중심으로”(2008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대학원생

1. 문제의 제기

2008년 봄, 우리 사회는 광우병의 공포에 휩싸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과정에서 미국 쇠고기 도입 현상이 졸속 타결됨에 따라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MBC PD 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영을 통해 광우병의 위협을 생생이서널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국민적 이슈로 만들었다. 이후 미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는 수많은 논의들을 촉발하였고, 이명박 정부 출범 초반 두 달여 간에 걸쳐 전국을 뒤흔든 촛불시위가 일어나는 주원인이 되었다.

미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 중 많은 부분은 광우병 위협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이었다. 일반적으로 과학적 사실은 이른바 팩트의 진위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과학 영역에 속한 정보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미 쇠고기 광우병의 경우 과학적 사실들을 둘러싼 정부의 주장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달랐다. 이른바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의견도 많은 경우 극단적으로 갈라졌다. 주요 신문, 방송과 같은 매스미디어, 인터넷상의 텍스트들도 마찬가지였다. 광우병을 둘러싼 과학적 사실들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은 한층 가중되었다. 그 와중에 미 쇠고기의 광우병 위협에 대한 논의는 근거 없는 광우병 괴담으로 변질되고 널리 유포되었음은 물론이다.

미 쇠고기 광우병 논란 사태는 소소한 차이와 방향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줄기세포 복제를 둘러싼 황우석 파동, 그리고 최근의 천안함 침몰 원인 논란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과학적 사실들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2천년대 이후 괴담 수준의 허위사실 유포, 국민적 차원의 불안과 패닉 현상 유발, 극심한 여론 분열, 정치적 갈등, 국민적 소요 사태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이 극단적인 사례라기보다는 구조적 차원의 병리현상이 아닌지, 현시대 한국사회에서 과학적 사실이 검증되고 소통되는 구조에 본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과학적 사실의 소통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과학적 사실을 둘러싸고 사회 갈등과 소요 사태가 빈발하는 이유는 과학 자체의 문제

인가, 아니면 소통되는 과정의 문제인가?

이 연구는 2008년 봄에 시작되어 그해 여름에 종결된,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미 쇠고기 광우병 파동을 중심으로 현시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광우병 파동 I: 전반기

1) 태동

우리나라는 1976년부터 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해 왔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쇠고기는 2001년부터 관세를 낮춰가며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과 호주 등에서 쇠고기를 수입해 왔고, 2003년에는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절반가량(44%)이 미국산 쇠고기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전체 수입 쇠고기의 68% 이상을 차지하는 양이었다(《한겨레》 2003. 12. 24).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 유럽에서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지만, 당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의 우려는 크지 않았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이 의심되는 소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 이 소는 도축된 이후 광우병 양성 반응이 확인되는 동안 이미 가공공장을 거쳐 유통되고 있었고, 미 당국은 쇠고기 1만 파운드(3,920kg)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미국산 쇠고기와 육가공품의 검역을 중단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였다.

미국은 이듬해 1월부터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 확대, 특정 위험물질(SRM) 식용 사용 금지, 다운너 소 도축 금지, 선진 회수육 제한, 도축 시 안전장치 강화 등 광우병과 관련한 각종 안전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쇠고기 주요 수입국들에 대해 수입을 재개해 달라는 의사를 내비쳤다(고종원·이한우·최규민, 2009: 261).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때 미국이 제시한 선결 조건들 중 하나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였다. 2006년 1월, 2003

년 광우병 소 발견 이후 2년간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이때 수입되는 소고기는 30개월 미만 소의 근육 부위 살코기에 한정되었다.

2006년 3월, 미국 앨라배마에서 다시 광우병 양성 판정을 받은 소가 발견되었다. 미국 검역 체계의 허술함이 다시금 지적되었지만, 당시 한국정부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그대로 제정했다. 그러나 2006년 10~12월 세 차례에 걸쳐 수입된 22.3톤의 미국산 쇠고기에서 여러 차례 작은 뗏조각이 발견되었고, 이에 우리 정부는 미 쇠고기를 전량 반송함으로써 수입을 금지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지나치게 수입 조건이 엄격하다”며 불쾌한 입장을 드러냈고, 한미 FTA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2007년 3월 말,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미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합의를 성사시켰다. 노 대통령은 “OIE(국제지역 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4월, 미국산 쇠고기가 검역을 통과함으로써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입이 재개되었다. 미국산 쇠고기는 당시 한우 가격과 대비해 매우 저렴했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그러나 2007년 5월 30일, 미 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뼈를 발라내지 않은 갈비로 채워진 두 박스가 발견되자, 한국 정부는 해당 미국 작업장에 대해 수출 중단 조치를 내렸다. 두 달 뒤에는 특정 위험물질(SRM)에 속하는 부위가 발견되었고, 이에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 중단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 다시 검역을 재개했으나, 열흘도 안 돼 갈비뼈가 두 차례나 검출되었고, 10월 5일에는 또 다시 척추가 발견되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 중단 조치와 수출 선적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을 개정 시행할 때까지 이어졌다.

당시 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앞두고,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도 언론과 방송, 그리고 반 FTA 단체들로부터 미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06년 10월 KBS 1TV ‘KBS 스페셜’에서는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미국 쇠고기 보고서”를 방송했고, 2007년 5월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는 “광우병 괴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진실게임”을 방송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미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우려하고 정부의 졸속 협상을 비판하는 내용이

었다. 또한 반미/반FTA 단체들 역시 2003년 이후부터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쇠고기라며 수입을 반대해 오고 있었다(고종원 외, 2009: 79).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개정을 위한 고위급 협의가 재개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미국으로 출국하여 FTA 비준안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리 정부가 고수하고 있었던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해서’ 수입하겠다는 조건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론되었다. 실제로 협상이 타결된 4월 18일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통제국에 적용하는 기준인 광우병위험물질(SRM), 즉 특정 부분과 등뼈 부위를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미국산 쇠고기에 걸었던 빗장을 사실상 완전히 풀어 주는 것이었다(《한국일보》 2008. 4. 18).

2) 광우병 논란의 대중적 점화(2008년 4월 말~5월 초순)

한미 FTA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 열흘 후, 2008년 4월 29일 MBC PD 수첩이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방영하였다. ‘다우너 소(쓰러지는 소)’의 충격적인 영상이 전파를 탔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는 아레사 빈슨의 사례가 방영되었다.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음을 강하게 전달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게 되면 광우병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제작진은 그러나, 아레사 빈슨의 사망 사례에서, 당시 그녀가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서는 마치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한 것처럼 결론을 유도하였다. PD 수첩이 방영했던 내용이 과장되고 왜곡되었다는 점은 차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에 대해 MBC는 후에 언론중재위, 방통심의위, 검찰 등으로부터 정정 보도를 지시 받았다. 프로그램 상의 허위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은 MBC를 기소하기도 하였다.

PD 수첩의 4월 29일 방영분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들 사이에 먹

거리에 대한 불안이 조성되었고, 동시에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소문들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젤리, 과자, 떡볶이, 오뎅국물, 피자를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 “음식뿐만 아니라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에도 소의 일부가 쓰이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이 있다(《조선일보》 2008. 5. 2)”와 같은 괴담들이 퍼졌다. 한 여자 연예인은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라는 글을 본인의 미니홈피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PD 수첩의 광우병과 관련한 첫 보도는 광우병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점화시켰고, 사흘 후 촛불시위가 시작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PD 수첩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이 생겨났고, 이러한 불안은 갖가지 루머뿐 아니라 뉴스 보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도 증폭되었다. 이는 곧 미국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정치적 이슈로 발전되었다. 5월 2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 사이트 ‘아고라’(촛불시위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끊임없이 촛불시위 동참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네티즌들은 이에 수십, 수백 개의 댓글을 달아 공감을 표현하였다. 촛불시위 당시에는 특히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코너에 60만 명 이상이 서명하기도 하였다(5월 4일에는 100만으로 늘어났다).

2008년 5월 2일 첫 촛불집회가 열렸다. 첫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2MB 투쟁연대’(cafe.daum.net/antimb: 후에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로 개칭)였다. 이 단체는 창조한국당 당원에 의해 개설된 카페로, 대선 직후부터 이명박 대통령 당선 무효와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수시로 열어왔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 카페는 긴급공지를 띄워 5월 2일 청계천에서 촛불집회를 열자고 제안했다(고종원 외, 2009: 85). 이렇게 시작된 촛불집회(촛불 문화제)는 시민들이 대거 가세해 큰 규모로 번졌다. 경찰은 당초 집회 인원을 300명 정도로 예상했으나, 당일 열린 촛불집회에는 약 1만 명(경찰 추산)이 참여했다. 다음날인 5월 3일은 ‘정책반대 시위연대’(cafe.daum.net/ourkorea: 후에 ‘정책반대 시민연대’로 개칭)의 주도로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약 1만 1,000명(경찰 추산)이 참여했다.

처음 촛불집회는 인터넷을 통해 집결된 10대 중고생들과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주로 참여했다[당시 청소년들의 대거 참여는 촛불집회의 폭발력을 크게 키웠다는

분석이 있다. 촛불집회 한 달 전인 4월 15일 교육부는 초·중·고 우열반 편성, 0교시 수업, 심야·보충수업 등을 허용하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반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종원 외, 2009: 85). 10대들이 집회 인원 중 절반 정도를 차지했는데, 특히 교복 차림의 여고생이 많았다. 학생들은 “0교시 허용, 촌지 합법화 등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이명박 대통령이 내놨다”, “점점 학교가 학원이랑 똑같게 된다”고 소리를 높였고, “미친소 너나 즐쳐드삼”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한겨레》 2008. 5. 5). 주최 측은 처음에 행사의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기 위하여 태극기와 카페 깃발만을 사용하고, 질서 유지대를 앞세워 시위대를 통제했다. 행사는 큰 충돌 없이 밤 10시쯤 끝났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7개 중대 3,700명을 청계천 일대에 배치했다(《경향신문》 2008. 5. 3).

초기에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세력은 ‘이명박 탄핵 카페’였지만, 곧 주도권은 주류 좌파 단체인 ‘광우병 대책 회의’로 넘어갔다. ‘광우병 대책 회의’는 지난 2년간 “한미 FTA 반대”를 줄기차게 주장해 오던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PD 수첩 방영 이후 광우병 담론에 대해 대중적 관심이 일어나자,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국민 감시단’을 결성하고 이어서 5월 6일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 대책회의’를 결성했다. 대책회의에는 참여연대, 민변,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등 12개 단체와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정당들, 광우병 국민감시단 등 사회단체, ‘이명박 탄핵연대’ 등 네티즌 단체까지 1,500여 개 단체가 가입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규탄 시위는 전국적으로 번졌다. ‘이명박 탄핵 카페’와 ‘정책반대 시위연대’와 같은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5월 4일에는 대전 은행동 사거리, 부산 서면 태현백화점 앞, 전주 전북대 앞 등지에서 200~1,000명가량의 인원들이 모인 가운데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다음 아고라 ‘이명박 대통령 탄핵’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누리꾼은 106만 명을 넘어섰다.

6일 저녁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터넷 모임 주최로 촛불 침묵시위가 열렸다. 시민, 학생들은 X자 표시가 된 마스크를 쓰고 침묵 촛불집회를 열었다. 서울 청계광장과 부산, 전주, 제주에서도 광우병 감시단 등이 주관한 촛불집회가 열렸다(《경향신문》 2008. 5. 7).

광우병 이슈를 중심으로 시위가 점점 크게 번지자, 5월 7일 정부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쇠고기 청문회’를 열었다. 본 청문회에서는 미 쇠고기 안전성 문제와 검역주권 문제에 대하여 격론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 모두 한미 간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합 민주당을 위시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졸속 협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퇴진을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기간 중 정상회담 선물용으로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는, 이른바 ‘선물론’이다. 한나라당 측은, 이미 거의 모든 협상 절차는 노무현 정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최종 합의만 현 정권에서 한 것이라는 ‘설거지론’으로 맞섰다.

쇠고기 청문회가 열린 5월 7일, 대학생들이 시국회의를 결성했다. 한양대, 이화여대, 숭실대 등 서울지역 18개 대학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는 7일 연세대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 대학생 시국회의’ 출범식을 열었다. 이들은 쇠고기 전면 개방 협상을 규탄하는 대학별 집회, 강연회를 열고 서울지역 80만 대학생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경향신문》 2008. 5. 8).

한승수 국무총리는 5월 8일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협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고 수입 쇠고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선일보》 2008. 5. 9).

또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며,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협상 관련 장관고시를 연기할 뜻이 없다고 발표했다.

촛불집회는 처음에 ‘광우병 공포’를 중심으로 동요되었던 10대 청소년들과 20대 초반 대학생들을 위주로 시작되었다. 이 무렵에는 촛불집회가 시민 전 계층을 대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차츰 국민들 사이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었고, 광

우병 위협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촛불집회의 참여 계층은 점점 다양화되고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금요일인 5월 9일에는 서울 청계천 광장 이외에도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수원 등에서 촛불집회가 열려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5월 9일 밤 MBC는 '100분 토론'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였다. 토론 1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2부에서는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를 주제로 격론이 오고 갔다. 미 쇠고기 수입을 찬성하는 측은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이태로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팀장이 출연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우석균 보건 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출연하였다. '끝장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무려 3시간가량 진행되었으나, 양측의 주장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기만 하였다. 방송 당시 미국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교민 주부 이선영 씨는 전화 통화를 통하여, "일부 한인 단체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했지만, 그들의 회견 내용은 교민 대다수의 의견과는 다르다"며, "미국에서 유통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95%는 24개월 미만이다. 많은 한인들은 24개월 된 소조차도 불안해 되도록 풀만 먹고 자란 소를 먹으려 한다. 이런 경각심에 한인 주부들도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말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경향닷컴 촛불팀, 2008; 《조선일보》 2008. 5. 9).

3) 정부의 강경론과 촛불집회의 확산(2008년 5월 중순~하순)

이 시기 정부 측 인사들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들, 루머들 그리고 촛불집회 등에 대하여 강경론으로 맞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5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지나친 광우병 공포감 조성이 인터넷과 지상파 방송을 통해 퍼지고 있다. 광우병을 걱정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과장되게 확대 재생산해서 국민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같은 날 복지부 장관은 농수산식품부 장관 공동 담화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합의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기준에 의거해 이루어졌음에도 일부에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제기하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인 것처

림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미국에서 수출되는 쇠고기는 미국의 국내 소비용 쇠고기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제품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잇따른 발언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5월 4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는 불법 집회이며, 촛불집회를 계속할 경우 주도자를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5월 7일, 보수 측 공정택 교육감은 “중고생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참석을 자제시키겠다. 학생들의 집회 참석은 전교조 교사들과 연관이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촛불집회 참가자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 5월 8일, 한승수 국무총리 역시 대국민 담화에서 강경한 대처에 대한 뜻을 밝힌 바 있다.

5월 11일에는 미 식품의약국(FDA) 영문오역 파문이 일어났다. 정부가 동물성 사료 금지 완화 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관보 내용을 잘못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경향신문이 “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의 내용이 정부의 설명과 다르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5월 2일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 자료’에는,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협상 내용이 담긴 미국 연방관보에는 “30개월 미만의 소는 도축검사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다”라 기술되어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협상 내용이 담긴 미국 식약청(FDA)의 영문(英文) 보도자료(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내용을 요약한 것)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반대로 해석, 오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국민께 불필요한 오해와 심려를 끼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쇠고기 협상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 이전(2005년 10월 미 정부가 입안 예고한 내용)의 것으로 오인한 것 같다”며 “지금까지 정부와 청와대가 파악한 것으로는 협상의 내용이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실무적인 실수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통합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정부가 연방관보를 오역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15일 예정된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고 주장했다(《조선일보》 2008. 5. 13). 미국과의 협상 절차가 졸속이었다는 의심이 국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가운데, 협상 과정에서의 잇단 실수들이 발견되자 정부는 궁지에 몰렸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더해가는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강경한 입장만을 고수하였고, 이는 국민들의 반발 심리를 자극했다. 5월 13일, 어청수 경찰청장이 “촛불집회는 불법이며, 주최자들을 사법처리 하겠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경찰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인터넷 괴담을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시킨 네티즌 21명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인터넷상에서 이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을 처음 제기한 ‘안단테’라는 네티즌도 포함됐다. 안단테는 고교생으로 알려졌는데, 6일 대운하 건설 추진, 영어몰입식 교육 추진, 부적절한 장관인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을 비판하며 인터넷 서명운동을 시작한 장본인이다(경향닷컴 촛불팀, 2009).

경찰의 시위 주도자 사법처리 방침이 정해지고, 경찰이 ‘안단테’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네티즌들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자수 운동’을 벌였다. 14일 경찰청 홈페이지는, “내가 촛불집회 참가자이니 나를 잡아가라”라는 글들로 도배되었고, 한때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다. 약 1,000건 이상의 ‘자수 글’이 올라왔고, 이 중에서는 자신의 실명을 밝힌 이도 많았다. 진보 언론에서는 이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행동에 족쇄를 채우려는 공권력에 맞서는 또 하나의 시민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항의가 이어지자, 5월 14일, 정부는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연기하였다. 7~10일간 고시를 연기하는 동안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더 얻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내용은 바꿀 수 없고 재협상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수입 조건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부여한 ‘광우병 위험 통제가능국가’ 지위를 상실할 정도의 중대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협상 내용을 바꾸지 못하도록 이미 양국 간 합의가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관 고시를 연기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은, 실망스럽지만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 무역대표부 그레첼 하멜(Hamel)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양의 의견(many more public comments)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의견들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멜 대변인은 그러나 “한국이 조속히 협정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조선일보》 2008. 5. 15).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5월 14일, 수입 조건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촛불집회는 5월 14일, 17일 등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이어지고 있었다. 촛불 집회의 주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뿐 아니라 정부의 교육 정책 반대, 대운하 반대, 의료 민영화 반대 및 보수언론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하여 강한 반발을 드러내기도 했다. 집회는 10대 청소년들에서 점점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17일 “안티-이명박 카페”는 여의도에서 청계광장까지 가두행진을 하였고, ‘미주 한인 아줌마 모임’은 온·오프라인에서 ‘광우병 소 반대 리본 달기’를 주도하였다.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우리집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집집마다 내거는 현수막 걸기 운동이 일어나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들이 줄어들지 않고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미국과의 서신 교류를 통하여 미 쇠고기 수입 조건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합의하였다. 5월 20일, 정부는 미국과 추가 협의를 통하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시 미 쇠고기를 수입 중단하는 것을 명문화 하였으며, 또한 미국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을 일치시키기로 하였다. “양측은 서한(A4 용지 1장 분량)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서한에는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을 언급한 지난 8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과 이를 지지한다는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지난 12일 발표문이 첨부됐다. 이와 함께 양측은 소 도축 과정에서 제거할 특정위험물질(SRM) 종류를 미국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서한에 담았다(《조선일보》 2008. 5. 21). 보수 언론에서는 이를 ‘광우병 불안’의 진앙이 댈은 두 개의 수입 조건을 사실상 무효화 한 것이라 보도했지만, 이에 대해 촛불집회 주최 세력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핵심적인 독소조항이 바뀌지 않고는 검역 주권 회복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당시 대중들 사이에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연일 촛불집회가 이어지자, 당시 연예인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여 ‘개념 연예인’이라는 칭호를 받는가 하면, 촛불집회에 참여해 공연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국민 정서에 호응했다. 김구라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생삼겹을 씹겠다”, 하리수는 “우리 국민들이 연구 대상 또는 쓰레기 처리반이 되지 않

도록 힘을 모아 우리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하자”, 김희철(가수)은 “재수 없게 미친 소 걸려서 나 병신되면 어찌지? 미친 소를 무슨 수로 구분해”라고 하였으며, 김장훈은 “내일(17일) 청계천에 갑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실제로 당일 촛불집회에서 공연을 하였다(고종원 외, 2009: 83). 이 밖에도 윤도현 밴드, 이승환 등이 촛불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연을 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5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이대통령은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였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 수입 조건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우월한 통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의 진심이 잘 드러난 담화였다고 평가했으나, 야권에서는 일제히 실망을 드러내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였다. 진보신당의 심상정 대표는 “대통령의 담화문은 광우병 쇠고기 대국민 사기극의 화룡점정을 찍은 것”, “재협상 언급 없이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변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헐박하는 것”, “오늘 담화문의 내용은 성난 쇠고기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 말했고, 노회찬 대표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미국에 조공은 바쳐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국민들은 동의 못한다”, “미국에게 가장 유리하고 상대국에게 가장 가혹한 FTA를 하필 우리가 체결해야 하는 이유를 대통령은 설명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유감은 짧고 설명은 길었다.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울며 겨자먹기식 사과 표명일 뿐”, “국민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국면 전환용 담화”라 하였고,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은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http://agendanet.co.kr/>).

정부는 성난 여론이 진정될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반발은 거세졌다. 5월 24일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5%는 “대통령 사과가 미흡하다”, 78.2%는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종원 외, 2009: 103). 이날 이후 촛불집회는 더욱 격렬해졌다.

3. 광우병 파동 II: 후반기

1) 촛불집회의 절정기(2008년 5월 말~6월 중순)

5월 말에서 6월 초순경은 촛불집회의 절정기였다. 다양한 계층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시기이며, 시위가 상설화되었다. 이슈가 쇠고기 문제에서 정부 및 보수 언론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일부 폭력 시위대가 등장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비폭력 시위의 기조가 유지되었다.

5월 24일, 촛불집회가 거리 시위로 격화되었다. 야 3당이 발의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부결된 다음날이었다.

이 때 ‘독재타도’라는 구호가 등장했으며, 정부는 물리력을 동원해 차도를 점거하고 시민들을 강제 해산시키며 시위대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25일 새벽, 처음으로 36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시위대는 ‘이명박 하야’, ‘고시철회’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저지’, ‘영어 몰입교육 반대’, ‘대운하 반대’ 등 정부 정책 전체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후 5월 26에서 28일까지 촛불집회가 계속되었다. 시민들은 “평화시위를 하자”와 “청와대로 가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서로 충돌하기도 하였다. 5월 초의 촛불집회와는 달리, 이 당시의 촛불집회에서는 서울 도심에 누비며 시위가 계속되었고, 더욱 격화되었다. 5월 27일 새벽,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하기도 하였고, 경찰은 시위대를 연행하였다. 시위대 안에서 강·온 양론이 계속하여 대립하는 가운데, 28일 새벽에는 경찰에 포위된 시민들이 스스로 호송차에 오르는 ‘자진연행’ 운동, ‘촛불 인간 띠 잇기’ 등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역시 이러한 주제로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찬반투표 대결이 벌어졌다. 아고라에서 4월 말에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 숫자는 5월 26일 132만 명을 넘어섰다.

계속되는 시위 속에서도 정부는 5월 29일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하였다[고시 의뢰는 행정안전부에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고시를 관보에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의뢰일로부터 고시가 실제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까지는 보통 2~3일이 걸린다(《경향신문》 2008. 5. 30)]. 여론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기존 합

의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은 선에서 고시 안을 확정하였다.

야권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내각 총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재협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하며 고시 무효화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농민 단체 회원들은 고시 발표장과 농수산식품부 청사에 진입하려 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고시 강행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고, 광우병 대책회의는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고시 강행으로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비로소 새로운 범국민적 항쟁이 시작될 것”이라 선언했다.

미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을 계기로 촛불집회는 더욱 격렬해졌다. 5월 29일 서울 도심에서는 1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특히 ‘유모차 부대’와 ‘예비군 부대’들이 집회에 등장했으며, 대학생 단체들의 참여도 많았다. 이날 저녁 역시 시위 도중 참가자들이 일어나 거리로 나서서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는 불법 시위가 계속되었고, 경찰은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래 최대 병력인 105개 중대 9,000명을 배치했다. 주말을 맞은 5월 31일에는 서울에서만 4만여 명, 전국에서는 총 6만 명(경찰 추산)이 시위에 참여해 지난 2일 시작된 촛불집회 중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되었다. 이날 지방 중소도시, 해외 교민과 유학생들도 촛불을 들었다. 경찰은 시위대의 청와대 진출을 막기 위해 전경 버스로 차단 벽을 설치했다. 일부 시위대는 전경버스를 타고 넘거나 버스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력적 대치 상황이 빚어졌다. 경찰은 시위대가 저지망을 뚫고 청와대로 밀려오자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며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40여 명과 70명의 시민이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고,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기 위해 6월 1일에는 대낮부터 거리 시위가 시작되었다. 1일 저녁에는 시민 2만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했으며,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 상황은 계속되었다.

촛불시위에 우호적인 언론 매체들은 촛불시위를 쇠고기 문제를 넘어 정권과 국민 간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들 매체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려는가”(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은 정녕 파국을 바라는가”(경향신문), “이명박 대통령, 국민의 피를 원하십니까”(오마이뉴스) 등의 호통이 쏟아졌다. 실제로 5월 말에 실시된 조선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는 21.2%로, 당선 초기에 비하여 급락했는데,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서(21.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고종원 외, 2009: 105).

촛불시위가 정권에 대한 대립 구도로 격화되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 언론들에 대한 반발심이 집단행동으로 표출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들 매체에 광고를 싣는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그것이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보수 신문을 향한 적대감은 촛불집회 초기부터 형성되고 있었다. 5월 초순부터 '이명박 탄핵 카페'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보수 신문들을 압박하기 위해 '조, 중, 동 비대위'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거나 '안티 조, 중, 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조, 중, 동 압박 운동 합시다'라는 서명 운동이 일어났고 게시물의 말머리로 [조, 중, 동 폐간], [조, 중, 동 박멸] 등이 붙여졌다.

보수 신문들을 향한 적대감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조, 중, 동 광고 중단 압박운동'이다. 이것은 5월 말, 한 네티즌이 '아고라'에 조선, 동아, 중앙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들 명단을 올리며 "항의 전화를 걸자"고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서 '조, 중, 동 폐간 국민 캠페인'(cafe.daum.net/stopcjd: 나중에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으로 개칭)이라는 카페가 개설되기도 하는 등 압박 운동의 행태는 구체화되었고, 이에 가담하는 네티즌들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폐간시키겠다는 목표를 천명하였다(고종원 외, 2009: 160).

네티즌들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들의 대표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광고를 내리라고 압력을 가하는 한편, 해당사의 홈페이지에 광고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도배하는 방법으로 광고주들을 압박하였다. 극단적인 경우, 자동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행사 서버를 마비시키거나, 여행 상품을 한꺼번에 10건씩 예약한 후 취소하는 등의 방법도 사용하였다. 이러한 빗발치는 항의에 동국제약, 명인제약, 르카프, 보령제약, BBQ, 신선설농탕, 목우촌, 신일제약 등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 중단을 선언하였다(고종원 외, 2009: 162). 이로 인해 보수 언론들뿐 아니라 광고주 기업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농심'은 이러한 과정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농심'의 인터넷 고객 상담원이 항의글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으로 언론사에 광고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방법이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중략) ...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의 1위 신문사입니

다. 구독률이 이렇게 높은 한 조선일보는 앞으로도 계속 번창해 나갈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글을 올린 것이다. 압박 운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농심’을 집중 타깃으로 하여 압박 운동을 벌였다. 당시 ‘농심’의 라이벌 기업 ‘삼양’은, 자사가 생산하는 컵라면에서 금속 너트가 검출되어 전량 리콜 조치를 하였는데, 네티즌들은 이 사건이, ‘농심’이 궁지에 몰리자 ‘삼양’을 음해하려고 조작한 것으로 의견을 모아갔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삼양라면 사주기’ 운동이 일어났고, ‘삼양식품’의 주가는 보름 사이 세 배 가까이 오르기도 하였다.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던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일단 유보했다. 6월 초, 청와대 참모들이 촛불 현장을 방문하며 국민과의 소통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 파악했고, 관보 게재의 유보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 때를 기점으로 정부의 태도가 급변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2일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고시) 유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여론이 진정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자, 다시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하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을 위해 미국 측과 여러 채널을 통해 ‘물밑 타진’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고, “핵심은 광우병 감염 우려가 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문제”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날 민심의 이반이 심각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여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도 일단 보류 방침을 정하고 정부 내 논의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 6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실상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를 수입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역시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될 때까지 수입 조건 고시도 안 하고, 검역도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같은 날,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재협상 요청을 거부할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 한국민들이 더 배우기를 바란다”고 말해 국민의 동요를 낚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민심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6월 4일에 실시되었던 지방자치 재보궐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전국 52곳 선거구 중

7곳에서만 당선자를 내는 데 그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성난 민심과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평가가 표심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다. 이를 후 대통령 실장과 청와대 수석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였다.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계속 득세하자,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광우병 대책회의’는 6월 5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국민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하고 ‘72시간 릴레이 촛불 집회’를 시작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들은 동맹휴업을 선언했고, 노동계도 총파업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월 6일은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몰렸다(경찰 추산 5만 6,000명, 주최 측 주장 20만 명). 연휴 이틀째인 6월 7일은 4만 2,000여 명(경찰 추산, 주최 측 주장 20만 명)이 참가했고, 8일 밤에도 4,000여 명(경찰 추산, 주최 측 주장 3만 명)이 서울 광장에 모였다. 3일 밤낮으로 지속된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는 서울에서 총 12만 명(경찰 추산, 주최 측 주장 50만 명)이 참가하였고, 주최 측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7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촛불집회는 전반적으로 ‘비폭력 시위’, ‘평화 시위’의 기조가 유지되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 어린 아들, 딸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다. 현장에서는 토론회와 즉석 강연이 열렸고, 어떤 이는 자발적으로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는 등 마치 대학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친구끼리, 가족끼리 삼삼오오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밤이 되자, 시위대는 서울광장에서 남대문 방향으로 난 왕복 10차선 도로를 점령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세종로 동상 앞쪽에 전경버스로 바리케이트를 쳤다. 일부 시위대는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 전경버스 위에 올라타거나 전경을 공격하였고, 경찰은 그들을 막기 위해 방패를 휘두르고 소화기를 뿌렸다. 처음에는 폭력적 시위 행위에 대해, ‘비폭력’을 외치며 ‘하지마’라는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이 많았다. 시간이 흘러 시위대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시위는 오히려 격렬해졌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각목과 쇠파이프가 등장했고 몇몇은 전경버스의 엔진을 망가뜨리거나 유리창을 깨기도 했다. 경찰과 시위대가 서로 소화기를 뿌려대면서 거리는 뿌옇게 변했고, 경찰은 새벽 5시경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며 10여 명을 연행했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폭력 시위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시민들은 극히 일부에 불

과했지만 이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는 비폭력, 평화 시위 원칙을 선언했고, 이를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6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쇠고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 일괄 사퇴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하여 진보 측 언론은 “이명박 정부가 이 같은 상황에 처한 데는 ‘국민의 눈높이를 헤아리지 못한’ 이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 운영, ‘고소영 청와대’, ‘강부자 내각’이란 비판을 자초한 ‘우리 사람 쓰기’, 대국민 소통 부재 등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였다(《경향신문》 2008. 5. 11).

6월 10일 촛불시위는 절정을 이루었다. 광우병 대책회의가 6·10 항쟁 21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6월 10일 촛불시위를 ‘100만 촛불 대행진’의 날로 정했다. 경찰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갑호 비상령을 발령했다. 시청 앞 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 일대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서울 도심에 8만 명(경찰 추산), 전국 80여 개 시·군에서 14만 명(경찰 추산)이 참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 대형 컨테이너를 동원하여 청와대로 가는 길목을 막았다. 이 컨테이너를 시민들은 ‘명박산성’이라 칭했다. 이날 시위에서는 각종 노동단체와 이익 집단, 재야 진보세력 등이 대거 참가하여 촛불시위에 합류했다. 공공운수연맹, 금속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켈기대회를 열고 시위에 참여했다.

저녁에 일과를 마친 시민과 학생들이 합류하며 시위 인원은 급격히 늘어 세종로 사거리부터 승례문까지 시민으로 가득 찼다. 촛불시위대는 이날 보수단체 회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선진화국민회의, 한미친선연합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6·10 촛불 대행진에 대한 맞불 집회를 벌였다. 촛불시위대와 보수단체 양측은 서로 맞구호를 외치며 피켓과 플래카드를 빼앗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은 6월 6일이나 7일처럼 폭력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이날의 촛불시위를 민주화 운동과 동일시하며, 촛불시위가 4·19, 5·18, 6·10 등 역사적인 반독재 민주항쟁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21년만의 합성, 제2의 민주화

시장 만능주의,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확대에 맞선 제2의 민주화 항쟁이 시작되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민주화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전환의 계기였던 6·10 항쟁 21주년을 맞은 10일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사회적 합의 없는 정책의 강행을 반대하는 '100만 촛불대행진'이 서울을 비롯한 부산·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열렸다.

시민들의 전국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독재타도·호헌철폐'를 외쳤던 1987년 이후 21년 만이다.

1,75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서울시청 앞 광장 등 전국 40여 곳에서 시민·학생 등 100여 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쇠고기 재협상", "이명박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서울 종로·부산 서면·광주 금남로 등지에서 밤 늦게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대행진에는 시민·학생들과 양대 노총, 교사, 6·10 항쟁을 주도한 범재야·종교인들이 대거 참가했다.

국민회의 측은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고 국민을 상대로 싸우는 대통령은 절대 지지 받을 수 없다"며 "100만 촛불을 보고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2008. 6. 11)

광우병 대책회의는 '6·10 항쟁 기념 촛불 대행진'이 성공하자, 촛불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미군 장갑차 사망 여중생 6주기', '분신한 고 이병렬 씨 장례식', '6·15 남북공동선언 8주년' 등 계속하여 명분을 만들어내며 시위를 이어가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15일에는 "촛불집회의 의제를 미국 소고기 수입 재협상에 국한하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 수돗물 민영화, 교육 자율화, 대운하 반대 및 공영방송 사수' 등 5대 의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종원 외, 2009: 112). 촛불집회를 정치의 문제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촛불시위 이슈 자체가 탈이념적인 '식품안전'과 '생활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들은 시민을 더 이상 끌어 모으지는 못했다. 16일 이후 촛불시위 참가자는 1,000명을 밑돌았고, 정치적 변질을 우려하는 단체들은 더 이상의 동참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2) 한미 추가 협상 타결, 촛불집회의 변질(2008년 6월 중순~6월 말)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위하여 13일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출국하였다. 12일 브리핑에서 김 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봤다”, “빠져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다섯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하여 19일 추가 협상을 타결하였다. 추가 협상 결과, 한미 양국은 자율규제와 정부보증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출입을 막기로 합의하였다. 추가 협상 결과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되었다. 협상 내용으로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QSA 프로그램을 통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차단’,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 수입 금지’, ‘검역 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 요인 발견 시 작업 중단 및 도축장 현지 점검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기대 이상의 큰 성과”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부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48시간 비상 국민행동’에 돌입했다. 주말인 21일과 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그러나 2만여 명을 동원하는 데에 그쳤으며,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많지 않았다(주최 측에서는 1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 이날을 기점으로 시위는 폭력적 시위로 변질되어 갔다. 시위에 참여했던 세력들은 ‘다함께’, ‘노동자의 힘’, ‘전교조’, ‘민주노총’, ‘공공노조’, ‘진보신당’, ‘철도노조’, ‘안티 이명박’, ‘아고라’ 등 소규모 시위대들이었고, 이들은 전경버스를 부수고 물병과 돌을 던지는 등 극렬 시위를 벌였다(《조선일보》 2008. 6. 23). 시위대는 ‘국민토성’이라 칭하며 모래주머니를 쌓아 전경버스 위로 올라가기도 하였고, 전경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당기기도 했다. 경찰 역시 시위대 해산을 시도하며 양측은 격렬하게 충돌하였다. 시위에서 과격 행동이 벌어지자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열되기도 했다. 22일 새벽 시위

대가 전경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내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고, 시위대를 지휘하던 국민대책회의 측은 “부상자가 발생했으니 밧줄을 치우자”고 제안했다. 이에 일부 시위대가 “실컷 선동해 놓고 밧줄을 놓아라 말아라 하느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일부의 과격한 이들의 행동과 평화집회를 원하는 대다수 촛불 민심은 다르다”고 말했다.

향후 촛불집회에 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정부를 여전히 믿을 수 없고 미 수입 소고기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측과, 정부의 태도 변화와 추가 협상을 얻어내었으니 이제 촛불집회는 그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이 당시 인터넷에서도 여론은 분열되었다. 극렬 시위가 계속되자, ‘촛불시위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또한, 추가 협상 타결 결과를 믿고 지켜보자는 주장과, 촛불시위가 일부 단체의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될까 안타깝다는 여론도 있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 불안 요소는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고, 근본적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책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며 시위의 과격화 경향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서 25일 정운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곧 재개될 것임을 알리는 것이다. 이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에서 “고시 강행은 국민을 향한 전쟁 선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낮 대책회의 대표자들과 소수의 시위대는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진행하다 전경버스에 가로막혔다. 또 다른 시위대는 도로를 점령하고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였다. 당시 경찰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시민들을 무더기로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80세 노인, 초등학교생,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이 연행되며 무차별 연행 논란이 벌어졌다. 이와 같은 경찰의 강경 대응에 격양된 시위대는 “오늘은 꼭 청와대로 가야 한다”며 경찰과 폭력적으로 대치했다. 이날 저녁 시위는 약 3,000명(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2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일부 시위대는 모래 계단을 쌓고 전경버스를 밧줄로 끌어내려 하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하여 분말소화기를 뿌리다 결국 물대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날 1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이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최대 숫자였다.

앞서 6월 20일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PD 수첩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6월 23일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 수첩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PD 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별도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 중앙지검 관계자는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만큼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건 수사를 위해 임수빈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형사2부 검사 4명을 투입한 전담 팀을 만들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8. 6. 26). 정부 측 입장은, PD 수첩이 촉발한 국민적 혼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검찰이 명예 훼손 사건에 4명의 검사가 포함된 전담 팀을 구성하는 등 전례 없이 전폭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야권은,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PD 수첩의 광우병 위험 보도가 정당한 지적이었다면서 집권 여당의 PD 수첩 공격은 마녀사냥식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였고, 통합민주당 측은 “한나라당이 방송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감으로 방송탄압에 나선다면 국민과 여당은 결코 좌시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마지막 행정 절차인 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가 26일 이루어졌다. 관보의 게재가 예고대로 시행되자, 이에 반발하는 거리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다. 이날 낮부터 시작된 집회는 저녁이 되자 더욱 격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경찰도 총력 대응하였다. 이날 저녁에는 시위대와 경찰간의 투석전이 벌어졌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았고 시위대는 계란을 던지고 까나리 액젓 물총을 쏘며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복한 시위대 중 100여 명이 연행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저녁 시위대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옥을 공격하여 건물 일부를 파손하고 기자와 근처 호텔 직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한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되어 있던 부산항 감만부두의 냉동창고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몰려가 “미국산 쇠고기 반출 금지”를 위해, 감만부두를 나가는 냉동 컨테이너 트럭의 내용물을 검사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반출을 봉쇄하며 농성을 벌였다.

촛불집회가 폭력적 시위로 이어지자, 여권 인사들과 보수단체들은 촛불집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표출했다. 27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촛불집회를 주도

하는 세력이 골수 반미단체라며, 핵심세력으로 진보연대를 언급하였다. 그는 “순수하게 국민 건강권을 걱정해서 모인 국민의 촛불시위가 점점 반미단체 중심으로 반미 시위, 정권 투쟁, 정치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촛불은 꺼져가고 깃발만 나부끼는 반미 시위, 정치 투쟁, 반정부 투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연합뉴스》2008. 6. 27). 같은 날, 자유시민연대 등 40여 개 보수단체들로 이루어진 애국단체 연합은 촛불시위를 규탄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시위가 순수성을 잃고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보수단체가 일방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왜곡하고 일부 언론들이 폭력사태의 책임이 보수단체에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폭력을 일삼는 촛불시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2008. 6. 27).

다음날, 촛불집회 주최 단체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간부가 경찰에 구속되었다. 서울 경찰청은 청와대로 가자고 시위대를 선동하고 이명박 정권퇴진 운동 등을 선동한 대책회의 집행부 간부인 안진걸 씨와 한국청년단체 협의회 간부 윤희숙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집행부 간부 여덟 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촛불집회 주최 측 관계자들이 구속된 것은 촛불집회 시작 이후 처음이었다.

정부의 장관 고시 이후 반발은 더욱 심해졌고, 여기에 집회 주최 측을 구속하는 등 정부의 강경진압 방침이 더해지자 시위는 폭력적 양상을 띠며 더욱 격렬해졌다. 시위의 주제는 ‘쇠고기 고시 강행 저지’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 심판’의 기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28일 시위는 쇠고기 장관 고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2만 명(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참여하여 6월 10일 이후 가장 큰 대규모 집회가 되었다. 이날 정부와 시위대는 초반부터 격렬하게 대치했다. 거리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전경버스로 시위대를 가로막았다. 시위대는 전경버스를 밟줄로 잡아당기고 차 벽에 계란을 던지고 살수차를 파손하였다. 이날의 시위는 최악의 충돌로 발전되었다. 이날 100명이 넘는 경찰과 시위대가 부상당했고, 집회 참석자 50여 명이 연행되었다(《연합뉴스》2008. 6. 29).

이 시기 촛불집회가 폭력적 상황으로 치달은 이유는 경찰이 시위에 대해 강경하게 진압하려 한 것에 더하여 일부 시위대의 과격 행동이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경찰이 시위대를 물리적 수단으로 강경하게 저지하려 하자 이에 가로

막힌 시위대는 이제 더 이상 ‘비폭력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득세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위의 강도는 계속 높아졌고, 초반 ‘평화시위’의 원칙은 무너졌다. 경찰은 과격 시위자들을 더욱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집회는 심각한 폭력적 충돌로 이어진 것이다(《연합뉴스》 2008. 6. 29).

경찰은 29일 시위를 원천봉쇄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전경 800여 명을 동원하여 서울광장으로 통하는 지하철 출구를 모두 차단하여 시위대들을 고립시키고, 주최 측의 무대 차량을 견인하는 등으로 촛불시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촛불집회는 무산되었다. 정부는 이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과격·폭력시위 조장·선동자나 극렬 폭력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 조치하겠다”며 “파괴된 기물 등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한국일보》 2008. 6. 30). 경찰은 30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진보 측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권 탄압으로는 촛불을 끌 수 없다”며 정부를 맹렬히 규탄했다(《국민일보》 2008. 6. 30).

3) 촛불의 소멸(2008년 7월 초~)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정부에 의해 촛불집회가 원천봉쇄 되자, 종교계가 참여하여 집회를 이끌으로써 촛불시위는 진정의 국면으로 전개되며 다시 비폭력의 기조를 되찾았다. 30일 대책회의는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함께 54차 촛불집회를 겸한 ‘국민존엄을 선언하고 교만한 대통령의 회개를 촉구하는 비상 시국회의 및 미사’를 개최했다(《한국일보》 2008. 7. 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대통령의 교만과 무능을 비판하고, 국민의 여론을 폭력적으로 찍어 누르는 정부를 개탄하는 한편, “촛불은 평화의 상징이며 비폭력의 꽃”이라며 시위대의 폭력을 자제할 것을 주장했다. 일부 기독교와 불교계도 이 같은 행보에 동참하며 릴레이로 시국 기도회와 법회를 열었다. 이 시기 촛불집회는 약 5,000명~1만 명 정도가 참여하며 평화적인 시위로 이어졌다.

종교단체가 주도하는 촛불집회가 닷새 동안 이어진 후, 주말인 7월 5일의 촛불 집회는 시민단체와 종교계, 야당과 노동계 등 사회 각계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대규

모로 진행되었다. 이날은 5만여 명(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50만여 명)이 참여하여, 6·10 '100만 촛불 대행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시위대는 승례문, 명동, 종로 일대에서 비폭력 평화행진을 벌이고 6일 새벽 자진 해산하여, 폭력적 대치 상황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주최측은 '국민 승리'를 선언했다(《경향신문》2008. 7. 6).

7월 5일을 마지막으로 대규모의 촛불집회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촛불집회 참여 인원은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다음날부터 서울광장 주변을 봉쇄하였고, 반발도 있었지만 촛불의 열기는 예전 같지 않았다. 광우병 대책회의 지도부는 체포를 피해 조계사로 피신한 후, 조계사에서 계속하여 농성을 이어갔지만, 집회의 주도 세력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이제 촛불집회는 주말이나 특정한 날에만 소규모로 열렸다가 두어 시간 만에 끝나기를 반복했다. 이 시기부터 광우병 공포가 사실과는 달리 크게 부풀려졌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국내외 언론들의 비판 여론과 함께 PD 수첩 보도의 편파·왜곡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또한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베이징 올림픽 개막 등으로 인해 대중의 관심은 광우병 공포와 촛불집회에서 차츰 멀어져 갔다. 8월, 광우병 대책회의 간부들이 체포되었고, 8월 30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에 "이번 주 토요일 촛불문화제는 도심에서 개최하지 않는다"는 공지가 올라오며, 마침내 촛불시위가 종료되었다(고종원 외, 2009: 120).

4) 'PD 수첩'을 둘러싼 공방(고종원 외, 2009: 65; 《연합뉴스》 2010. 12. 2 발췌/정리)

광우병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주체 중 하나는 MBC의 PD 수첩이었다. 2008년 4월 18일 한미 소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된 열흘 뒤인 4월 29일, MBC PD 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방영하여 국민적인 광우병 공포와 두 달여에 걸친 촛불집회의 불씨를 댕겼다. 이후 PD 수첩은 정부 측과의 길고 긴 갈등 및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다.

PD 수첩이 제기한 광우병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5월 5일, 농식품수산부는 언론 중재위원회에 PD 수첩에 대한 반론·정정보도를 신청했다. 5월 13일, PD 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한다. 이날 방송에서 미국인들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미국에서 유

통되는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와 같다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와 시위 세력 간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촛불집회의 열기를 더했다. 5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는 PD 수첩 측에 ‘주저앉는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PD 수첩 측은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이를 제기하며 “언론중재위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 정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하였다. 5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 수첩에 대한 심의를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6월 중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아레사빈슨의 사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6월 20일에 농수산식품부는 PD 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서울 중앙지검은 PD 수첩 사건을 특별전담수사팀(형사 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및 재판은 향후 2년여간 계속된다. PD 수첩은 오보 논란에 대한 해명으로 6월 24일 ‘쇠고기 추가 협상과 PD 수첩 오보 논란의 진실’을 방영한다. 여기서 PD 수첩 측은 오역으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오역이 아니라 의역”이라고 주장했다. 일주일 뒤, MBC 노조는 정부의 PD 수첩 수사에 반발하며 ‘언론탄압 권력복종 정치검찰 규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다.

7월 2일, 검찰은 MBC PD 수첩 측에 ‘일본 테이프’ 870분 분량과 기초 취재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MBC 측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다. 7월 7일 검찰이 PD 수첩의 인간광우병 발언 유도 가능성을 제기했고, 같은 날 MBC PD는 긴급총회를 열어 PD 수첩에 대한 부당한 검찰수사를 규탄했다. 7월 11일, 검찰은 PD 수첩 제작진 4명에게 소환을 통보한다. 그러나 7월 15일, MBC 측은 ‘PD 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 방송을 강행하는 한편, PD 수첩 제작진 김보슬, 이춘근 PD와 작가 2명은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 검찰은 이에 소환을 재통보하고 앞서 요청했던 자료의 제출도 다시 요청했다.

7월 16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PD 수첩에 대한 심의 결과 6군데의 의도적 오역과 단정적 표현 등으로 인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렸다. 7월 24일 검찰은 조능희 CP 등 PD 수첩 제작진의 소환을 재통보하고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을 소환하여 피해자를 조사했다. 일각에서는 ‘방송장악저지 범국민행동’이 출범하기도 했다.

7월 29일 검찰은 PD 수첩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PD 수첩 방영 내용 중 19곳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다고 발표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7월 31일, “PD 수첩이 일부 허위 부분을 정정·반론보도 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PD 수첩은 8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방송 취지를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8월 12일, MBC는 결국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이행하고, 이어서 PD 수첩 책임자인 조능희 CP와 송일준 부국장을 보직해임했다. 그리고 9월 4일, 국민소송인단 2,469명은 PD 수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듬해 1월 7일, PD 수첩을 수사하던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PD 수첩 사건 주임검사인 임 부장은 PD 수첩이 부분적 오역 등으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점은 인정되지만 언론의 자유 등에 비춰볼 때 제작진을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 때문에 강제 수사 등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수뇌부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2009. 1. 7). 검찰 측은 PD 수첩 사건을 형사 6부에 다시 배당하였다. 2월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16부는 PD 수첩 관련 국민소송인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3월 초, 검찰은 PD 수첩 제작진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3월 말 이춘근 PD를 체포한다. 다음달 15일 김보슬 PD도 체포된다. 검찰은 여러 차례 MBC 본사를 압수수색하려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된다. 4월 27일, 조능희 전 PD 수첩 CP와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4명이 체포된다. 그리하여 6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PD 수첩 일부 내용을 정정·반론 보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다. 다음날 PD 수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12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PD 수첩 제작진에 대해 징역 2~3년의 형을 요청한다.

그러나 2010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법 단독재판부에서 PD 수첩 제작진은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 받는다. 계속되는 조사와 원본 테이프 검증 절차가 이루어진 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시 징역 2~3년을 구형하지만,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에서는 1심과 같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과장과 번역 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으로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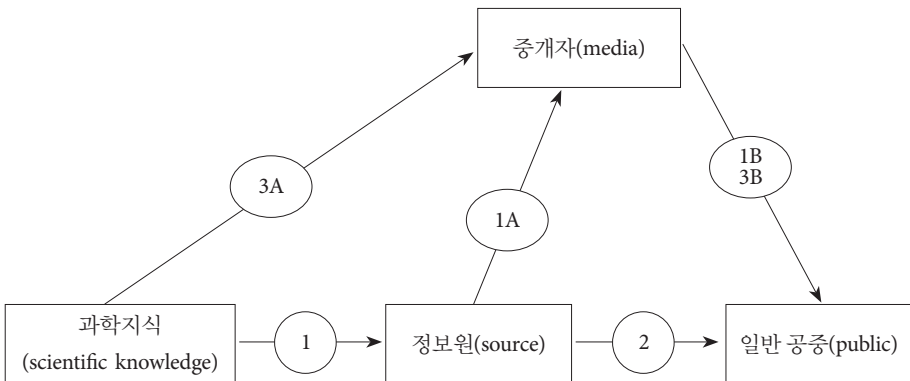
내용이 허위지만 의도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편집방식에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목적의 과장이 있었더라도 허위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동아일보》2010. 12. 2).

4.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서의 광우병 파동

1)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그림 1〉은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나타낸다. 이 모형의 출발점은 소통되는 내용으로서의 과학지식이다. 과학지식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정보로서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일반 공중에 의해 접근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는 과학자 내지 전문가로 통칭되는 정보원에 의해 중개되어 일반 공중에게 최종 전달된다 (과학지식 → 1 → 정보원 → 2 → 일반 공중의 경로).

최근 들어 보다 일반적인 과학정보의 전달 경로는 과학지식이 정보원을 거쳐 대중적인 중개자(media)를 통해 일반 공중에게 도달하는 것이다. 대중매체가 과학자나 전문가의 입을 빌려 과학정보를 공중들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과학지식 → 1 → 정보원 → 1A → 중개자 → 1B → 일반 공중)(Kim, 2007).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 의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 부르는 소통현상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



〈그림 1〉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모형

이다. 정보원과 일반 공중을 매개하는 중개자의 역할에 따라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질이 좌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중개자가 전문적인 정보원을 경유하지 않고 과학지식을 직접 일반 공중들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과학지식 → 3A → 중개자 → 3B → 일반 공중). 대중적인 미디어 내지 전문적이지 못한 전달자가 전문적인 정보원의 역할을 대체하는 경우이다. 전문적인 정보원을 통해 과학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가운데 미디어가 과학정보를 직접 취재해 보도하는 위급한 재난 상황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적인 과학정보의 부정확한 전달, 왜곡,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장애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2) 소통 대상으로서의 광우병 이슈의 특성

이상의 모형은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광우병이라는 과학정보 내지 지식이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우선, 2008년 봄에 우리 사회를 뒤흔든 미 쇠고기 광우병 파동의 뿌리에는 광우병이라는 과학 정보 내지 지식의 속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광우병은 전문성을 요하는 질병과학에 속하는 지식으로, 전형적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학정보로서의 속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미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발생 위험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과학적 사실들이 체계적으로 조합되어야 한다. 광우병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광우병이 전염되거나 발병하는 원인이 되는 물질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어떠한 식으로 축적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주로 확산되며, 인체에서 발병하게 되는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발병할 경우 치사율은 어느 정도이며 광우병의 발병과 관련한 유전적 요인들이 존재하는지, 전염이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적 장치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통제 기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의 추정을 위해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들은 무수히 많다. 이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적절한 값을 대입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이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일은 모두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과학적으로 추정된 위험 수치는,

위험 조건들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체계 안에서 반드시 사실적 증거를 통하여 도출되어야 과학적 증거로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술적 위험들은 이와 같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체계 안에서 정의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불확실성을 포함하게 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정보를 일반 대중을 상대로 소통시키는 데(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과학지식이나 논리체계가 미디어를 비롯한 비전문인들에게 직접 커뮤니케이션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과학정보의 사회적 소통을 뒤틀리게 하는 가장 큰 요소라 할 것이다.

김학수(1989)는 과학기술의 특성으로 추상성(abstractness), 전문성(specialty), 복잡성(complexity)을 꼽고 있는데, 이 모두가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대중에게 전파되기 어려운 정보 특성들이라 할 수 있다.

추상성은 세상의 현상들을 가장 간략하게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 비롯되었는데, 과학지식은 추상화의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며 이를 통해 일반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추상화의 정도가 높은 정보일수록 일반인들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경험과 동떨어져 있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게 된다.

전문성은 과학지식이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대상(과학 전문가 집단)을 목표공중으로 해서 매우 깊이 있게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지식을 이해하는 일은 기본적인 과학 소양뿐 아니라 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지식까지를 요구하며, 또한 그 과학 분야 고유의 전문용어와 규칙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복잡성은 과학지식에 수많은 요소들이 관련되고 이들 간의 연결구조가 매우 복잡다단하다는 것을 말한다. 과학적 지식이 고도화되고 세련될수록 그것이 포함하는 요소들 및 이들 간의 구조는 더욱 복잡해진다. 과학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은 바로 요소들 간의 관계들을 설정하고 기술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작업이 축적되고 또한 전문화됨에 따라 과학지식이 한층 더 복잡해지는 것은 필연적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과학지식의 특성으로 인해 대중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하여 과학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 된다.

또한 과학에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 존재한다(Hom, Plaza, and Palmen, 2011). 과학지식의 축적 과정은 엄밀하게 통제되는 조건에서 실험을 통하여, 혹은 엄밀하게 가정된 조건들 사이의 논리를 이용하여 변인들의 관계를 기술하는 작업들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 실제로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엄밀하고 까다로운 통제 조건들 아래에서다.

반면 광우병 이슈와 같이 과학적 사실들이 현실적 조건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제의 재난상황에서는 과연 어떠한 상황적 조건들이 어떠한 크기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완벽한 추정이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사건들을 똑같이 재현해 보지 않는 이상, 과학 정보들의 논리적 추론을 통하여 세부적 현상들까지 모두 완벽하게 기술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다. 불확실성의 요소들은 사실 엄밀한 재현을 통한 사실 증거를 통하여 확정되어야 하지만, 많은 경우 논리적 증거만을 통하여 추정되기도 한다. 이렇게 실제 문제에 있어서 존재하는 불확실성은 비전문가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과학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장애가 되는 특성이며, 과학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한 기술적 체계를 통하여 도출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불확실하다는 과학정보의 특성은 일반인을 비롯한 비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도 과학정보가 임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실제로 미디어를 통해 과학적 위험이 보도될 때에, 위험을 추정하는 과학적 체계나 사실 증거를 통한 입증 등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경우의 미디어 보도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성급한 일반화와 같은 ‘논리의 역전’이 발견된다.

이는 다수의 미디어가 과학적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범하고 있는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는 많은 경우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며, 그 안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를 추정하는 방식의 구조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에게 과학기술의 위험에 대한 인지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종래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미디어가 위험을 보도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높은 수준의 오류가 나타나고 있으며, 위험과 관련된 특정 내용을 과장하거나 선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키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Combs and Slovic, 1979; Bell, 1994; Takahashi, 2011).

이는 사실상 추측성 보도에 속하지만, 많은 과학보도에서 이러한 추측성 보도들이 마치 과학적 사실의 보도인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미디어의 부정확한 과학정보 보도 관행은 그 사실성, 객관성, 전문성에 대한 신화로 인해, 단순한 사실의 왜곡을 넘어 종종 심각한 여론의 왜곡 및 패닉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2) 정보원과 미디어

이상의 논의에 기초할 때, 광우병 이슈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과학정보였다고 할 것이다. 정보원과 일반 공중 사이에서 이를 중개함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가 센세이셔널리즘에 휩싸여 과학정보를 과장하거나 선동적으로 보도할 경우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Comb and Slovic, 1979; Bell, 1994; Kim, 2007; Takahashi, 2011).

실제로 PD 수첩의 보도는 이러한 보도 방식을 통하여 극적인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할 것이다. PD 수첩이 첫 화면으로 방영한 주저앉은 증상을 보이는 다운너 소를 광우병 소로 묘사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다운너 소의 발생 원인은 무려 59가지가 있고, 광우병으로 인해 그러한 증상을 보였을 확률은 실제로 무척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프로그램은 충격적인 다운너 소의 영상을 통하여 광우병의 존재와 위험을 과장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오류의 책임을 전적으로 미디어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미디어의 보도행위 자체가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 정보의 정확한 전달 목적에 우선하는 보다 중요한 미디어의 기능 중 하나는, 대중 일반의 이목을 효과적으로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는 수용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전달 내용에 오락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수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디어의 관행은 과학 정보를 전문적으로 묘사하거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일과는 많은 경우 상충하게 된다(Boykoff and Boykoff, 2004; Boykoff and Boykoff, 2007; 페티스·송해룡·김원제, 2009: 57). 만약 과학정보를 정

확하게 서술하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실제로 그 정보를 다수의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대중 매체의 과학 보도는 이처럼 대중성과 과학적 전문성 간의 모순적 갈등을 내포하게 되며 전자로 쏠리는 경우 왕왕 심각한 부정확성, 불공정성의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다. 광우병 위험을 보도했던 PD 수첩의 경우도 이러한 대중성과 과학적 정보 제공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근원적인 오류가 발생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의 정보 전달은 종종 현실맥락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필연적으로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게 된다. 문제는 과학지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들과 더불어 불확실하게 존재하는 측면들이 종종 이와 같은 정치적 목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목적에 의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과학 보도에서 과학적 사실이 뉴스가 되는지의 여부, 적절한 '사실'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 그리고 누가 해당 과학 개념들을 정의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 받는지에 있어 이데올로기는 강력한 선택의 기제로서 작동한다(Carvalho, 2007). 특히 과학적으로 극히 복잡하거나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이슈들을 대중들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미디어들은 많은 부분을 추론적으로 보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도 내용들은 왕왕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다.

미디어는 과학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과학지식에 접근하여 정보를 생산하기도 한다. 특히 광우병 사태의 경우 일반적인 과학 커뮤니케이션 흐름과 달리 최초 정보원이 기존의 과학전문가가 아닌 비전문적 미디어이며, 이들은 과학정보의 객관적 전달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실제로 광우병과 관련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포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PD 수첩은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을 강행한 정치권력 비판의 목적으로 과학정보를 편집하고 구성하여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하였다. 이는 중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편집하며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PD 수첩의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이른바 PD 저널리즘의 전형이었다.

윤석민(2011)은 이러한 PD 저널리즘이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할 위험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기자 저널리즘과 달리 PD 저널리즘은 도덕성, 정의의 실현에서 출발한다. 소재

선택 차원에서 약자와 강자라는 이분법적 도식에 기초해 인권이나 복지 관련 소재를 빈번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후자는 사실 입증을 위해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영상을 모으고 이를 꿰맞추어 일정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견지에서 기자 저널리즘이 사실의 반영 내지 전달이라면 PD 저널리즘은 사실의 창작에 가깝다. ... (중략) ... 종합적으로 PD 저널리즘은 자유롭게 사실 너머의 진실을 밝히는 심층탐사 저널리즘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할 가능성을 지닌 방송 저널리즘 형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뒤집어 볼 경우, 게이트키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특정한 의도에 따라 창작된 스토리가 시청자 앞에 객관적 저널리즘의 이름으로 등장할 위험을 의미한다(윤석민, 2011: 195).

설사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등장시키는 경우에도 미디어의 선택성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Shepherd, 1981; 페터스·송해룡, 2005; 이화형, 2007; Takahashi, 2011). 실제로 미디어는 잠재적 정보원(potential sources) 중 일부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엘른노 싱거 등(싱거·앤드레니, 2003)은 누가 정보원으로 선택되는지에 관해 두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하나는 '접근의 용이성'이고, 둘째는 '적합성과 뉴스가치'이다.

실제로 광우병 파동 당시 MBC, 한겨레, 경향신문, 프레시안 등 광우병의 위험성을 강조한 매체들은 소수의 인사들을 '전문가'로 반복 인용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은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등이었다(고종원 외, 2009: 354). 이들 미디어가 광우병에 대한 과학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자 한다면 의료 미생물학 전공자나 수의 미생물학 전공자, 혹은 보건 의료정책 관련 예방의학 전공자들을 정보원으로 선택했어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광우병 위험을 대중에게 퍼뜨린 미디어들 속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정보원들은 가장 확실한 과학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는 거리가 있었다.

정리하면 광우병 파동 시에 소수의 전문가들이 과학정보의 제공자로서 활용되었고, 그들의 의견이 신뢰성을 가진 정보로서 유통되었다. 그들은 전문가 중에서도 강하게 정치색을 띠는 활동가에 가까웠고, 과학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보다는 특정 매체가 듣고자 하는 방향의 의견들을 말해줄 수 있는 인사에 가까웠다. 이

는 광우병에 대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왜곡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3) 중개자로서의 인터넷과 일반 공중

인터넷은 광우병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는 주요 경로였다. 촛불집회가 시작되고 집회가 조직화된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였으며, 광우병과 관련한 격렬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던 공간도 인터넷이었다. 즉, 광우병에 대한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 인터넷 공간은 정보가 유통되는 거대한 중개자(mediator)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광우병 파동이 전국을 흔들게 된 데는 이와 같은 인터넷이라는 중개자의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터넷의 특성은 쌍방향적 정보 흐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정보를 생산하는 정보원(source)과 그 정보를 수용하는 일반 공중(public)의 구분이 모호해질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수용자 스스로가 정보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나타나는 정보 흐름의 특성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일반 인이나 시민단체 회원과 같이 과학적으로 비전문적인 주체들이 과학정보의 수용자, 전달자인 동시에 때때로 과학정보를 생산하기도 하는 정보원의 기능을 한다(강진숙·장지훈·최종민, 2009). 이에 따라 과학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전문적 과학의 맥락에서 이탈되어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과학정보는 과학적 체계의 맥락에서 멀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과학정보는 정치적·이념적 요소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부정확하게 활용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두 번째 특성으로, 인터넷 공간에서는 과학정보들이 일방향적이거나 단순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다중적으로, 무한히 반복되어 유통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 내용은 끊임없이 확산·증폭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 내용의 변형이 오기도 한다. 재난 상황에서 위험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기제에 대한 '위험의 사회적 증폭 모형(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ramework: SARF)' (Kasperson et al., 1988; Renn, Burns, Kasperson, Kasperson, and Slovic, 1992)에 따르면 위험 사건은 사회적 요소, 심리적 요소, 문화적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 공중에게 인지될 때 실제 위험은 객관적 크기보다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증폭의 기제는 정보가 ‘증폭 역(amplification station)’이라 일컬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주체들, 예컨대 과학자, 위험 관리 기관, 미디어, 오피니언 리더, 개인 네트워크 등을 여러 번 거칠수록, 인상적인 부분이 선별, 재해석되고 사회적 가치가 부여되면서 증폭된다는 것이다(Renn et al., 1992; 페터스·송해룡, 2005; 오미영·최진명·김학수, 2008; 김원제·이창주·하연희·조항민, 2009). 인터넷은 이와 같은 위험의 사회적 증폭을 극대화하는 특성을 어떤 미디어보다도 강하게 지닌 미디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광우병 파동의 확산과정에서 인터넷이 담당할 역할이 전형적으로 그러하였다. 인터넷에서 다수의 비전문적인 정보원들과 매개자, 그리고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의해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유포된 광우병 관련 내용들의 대부분은 전문적인 과학 정보가 아니라 과학 체계의 맥락과 분리된 불확실한 정보에 가까웠다(노진철, 2009). 이처럼 부정확성을 내포한 정보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유통, 선별, 재해석, 과장되는 과정을 거쳐 원래의 과학정보와는 동떨어진 ‘괴담’ 수준의 정보들이 생겨났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부정확한 과학적 사실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광우병 괴담 10문 10답’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적한 괴담의 예로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 ‘미국 내 치매환자가 약 500만 명인데 이중 25만~65만 명이 인간광우병으로 추정된다’,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 ‘키스만 해도 광우병이 전염 된다’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과학적 반론은 실제로 괴담이 만연한 상황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실제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의 시민단체는 정부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며 나름의 근거와 추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주장들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광우병 파동이 지속되는 내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은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맹위를 떨쳤다.

정리하자면 광우병 파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중개자인 인터넷은 그 속성상 과학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미디어였다.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광우병 이슈가 지속적으로 변형, 확산되면서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정보는 점차 괴담으로 변질되었다. 광우병 괴담의 지배적인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의 속성이 변화되지 않는 소통의 구조적 조건 속에서, 이러한 괴담에 대한 대안적 담론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과학정보를 수용하는 일반 대중 역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로서 참여한다. 일반 대중은 과학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과학정보의 편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벨(Bell, 1994)에 따르면,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 발견되는 심각한 편향이나 오류는, 미디어 보도의 전문적 보도 내용 자체가 편향되거나 잘못되는데 기인하기보다는 수용자가 미디어 내용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으로 인해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일반인들이 과학적 위험 정보를 인지함에 있어 감성적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에 관한 연구는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위험 판단과 감정적인 맥락과의 상관관계이다. 독일의 울리히 연구소의 연구(페터스 외, 2009: 46 재인용)에 따르면 동일한 피해 결과를 묘사한 기사에 대하여 한 버전은 분노를, 그리고 다른 버전은 관용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조작하였는데, 분노 기사를 접한 피험자가 관용적 기사를 접한 피험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위험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우병 이슈의 경우, 미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졸속 협상'을 했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며 분노의 정서와 맞물렸다. 또한 반미 성향을 가진 단체들이 촛불시위를 비롯한 논의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역사적 맥락과 관련한 반미 정서를 더욱 부추겼고, 이 또한 분노를 증가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 FTA가 신자유주의를 확대하고 시장 만능주의와 무한경쟁을 부추길 것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경쟁에 대한 피로를 느끼던 다수의 국민들이 쇠고기 수입 결정에 대해 더욱 반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윤석민(2011)의 분석이다.

개인들은 공포심을 극대화시킨 방송, 그리고 이를 확대 재생산한 인터넷 괴담에 접하자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이 위협에 처했다는 생각에 비이성적인 패닉상태에 빠져 들었다. 여기에 애국주의 열망에 사로잡힌 국민의 입장에서 굴욕적인 협상 타결로 국가 자존심이 허물어졌다는 분노가 겹쳐졌다. 두 개의 뇌

관이 동시에 건드려진 것이다. 폭풍과 같은 파장이 몰아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윤석민, 2011: 196).

5. 논의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소통의 위기 사태를 겪어 왔다. 그 중에서도 2005년의 황우석 사태, 2008년의 광우병 파동, 그리고 2010년의 천안함 폭침 등은 전문 과학 분야의 사안들이 대중적, 사회문화적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핵심 기제로 작용했던 사건들이었다.

황우석 사태는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 및 논문의 진실성에 대한 의혹이 사건의 발단이 되어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던 국민들에게 막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광우병 파동은 괴담 수준으로 부풀려진 광우병 위험으로 인해 십대 청소년들을 포함한 전국민적 시위가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갖 출범한 이명박 정부를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또한 천안함 침몰의 원인과 관련하여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과 함께 공식 조사 결과에 대한 진위공방들이 난무했던 천안함 사태 역시 과학적 사실들을 둘러싸고 대규모의 대중적 소요가 발생했던 사례다.

이러한 사태들에 있어서 과학적 사실 내지 정보가 대중들에게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었고, 과학적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가 사태의 전개에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중에서도 2008년 봄,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광우병 파동은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수반한 파행이었지만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사례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이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 과학적 사실을 둘러싸고 사회 갈등과 소요 사태가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전달되는 내용으로서의 광우병 이슈, 그것을 매개하는 정보원 및 중개자의 속성, 그리고 일반 공중의 속성은 과학정보로서의 광우병 이슈를 괴담화 하고 이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들을 패닉상태에 빠뜨리는 최적의(최악의) 조합으로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소통되는 내용으로서의 광우병 이슈는 전형적으로 복잡하고 논쟁적이며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전문적 과학정보 내용물의 특성을 지님으로써 이러한 총체적 파동의 일차적 원인을 제공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모형에 비추었을 때 표면상 지배적인 소통 모형은 과학지식 → 정보원 → 중개자 → 일반 공중이었지만, 과학지식이 비전문적인 중개자(인터넷 담론)에 의해 직접 일반 공중에게 전달되는 양상도 이에 못지않게 두드러졌다. 정보원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정보원의 구성은 수적 및 질적으로 심각한 편향성을 드러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광우병 정보의 소통 과정은 후자에 가까웠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전문적인 과학정보의 부정확한 전달, 왜곡, 이로 인한 소통 장애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2008년 봄에 우리가 목격했던 사태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소통의 구조는 하시라도 제2, 제3의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내며 사회적 갈등과 파행을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천안함 폭침의 원인을 둘러싼 사회여론의 분열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기술과학이 가장 중요한 기회임과 동시에 위협으로 대두하는 현시대의 상황은 과학적 사안을 둘러싼 사회적 소통의 파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속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왜곡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모형이 자리 잡은 구조 속에서 대안적 정보원으로서의 과학집단이나 정부가 “광우병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정보의 제공” 내지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적 소송”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소통되는 사안의 속성, 정보원, 중개자, 그리고 일반 공중의 모든 단계, 그리고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소통의 구조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바, 그 해법 역시 중장기적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함의이다.

참고문헌

- 강진숙·장지훈·최종민(2009), “2008 촛불집회 참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대학생 참여자 및 1인 미디어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3권 4호: 7-48.
- 경향닷컴 촛불팀(2008), 《촛불, 그 65일의 기록》, 경향신문사.
- 『경향신문』,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 각종 일간지 및 인터넷 뉴스
- 고종원·이한우·최규민(2009), 《촛불에 길을 잃다》, 나남.
- 김원제·이창주·하연희·조항민(2009),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인 및 요인 간 영향 관계에 관한 탐색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1: 80-123.
- 김학수(1989), “과학보도와 과학정보망의 체계화”, 한국언론학회 과학보도 심포지엄.
- _____(1999), “공공과학과 과학 커뮤니케이션과정 연구”, 《한국언론학보》 43(4): 79-110.
- 김학수·하효숙·최진명(2011), “방사선과학 관련 커뮤니케이션모델(PUS vs. PEP/IS) 비교실험 연구”, 《한국언론학보》 55(4): 215-232.
- 노진철(2009),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본 광우병 공포와 무지의 위험소통”, 《경제와 사회》 통권 제84호: 158-182.
- 싱거, 엘른노(Singer, Eleanor)·필리스 M. 앤드레니(Phyllis M. Endreny) (2003), 《위험보도론 — 매스미디어는 사고, 질병, 재해, 재난을 어떻게 보도하는가?》, 송해룡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 오미영·최진명·김학수(2008), “위험을 수반한 과학기술의 낙인효과”, 《한국언론학보》 52(1): 467-500.
- 윤석민(2011). 《한국사회 소통의 위기와 미디어》, 나남.
- 이화행(2007), “일간지 과학지면의 특성과 보도 경향 비교 연구”, 《언론과학연구》 7(1): 223-261.
- 페터스, 한스 페터(Peters, Hans Peter)·송해룡(2005), 위험 보도와 매스커뮤니케이션》, 송해룡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 페터스, 한스 페터(Peters, Hans Peter)·송해룡·김원제(2009), 《위험 인지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 Bell, A. (1994), “Media (Mis)Communication on the Science of Climate Chang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3(3): 259.
- Boykoff, M. T. and J. M. Boykoff (2004), “Balance as Bias: Global Warming and the US Prestige Pres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4(2): 125-136.

- _____ (2007), "Climate Change and Journalistic Norms: A Case-Study of US Mass-Media Coverage," *Geoforum* 38(6): 1190-1204.
- Carvalho, A. (2007), "Ideological Cultures and Media Discourses on Scientific Knowledge: Re-reading News on Climate Chang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16(2): 223.
- Combs, B. and P. Slovic (1979), "Newspaper Coverage of Causes of Death," *Journalism Quarterly* 56(4): 837-843, 849.
- Hom, A. G., R. M. Plaza, and R. Palmén (2011), "The Framing of Risk and Implications for Policy and Governance: The Case of EMF,"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20(3): 319.
- Kasperson, R. E., O. Renn, P. Slovic, H. S. Brown, J. Emel, R. Goble, et al. (1988),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 Conceptual Framework," *Risk analysis* 8(2): 177-187.
- Kim, H. S. (2007), "PEP/IS: A New Model for Communicative Effectiveness of Science," *Science Communication* 28(3): 287.
- Renn, O., W. J. Burns, J. X. Kasperson, R. E. Kasperson, and P. Slovic (1992),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heoretical Foundations and Empirical Applic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137-160.
- Shepherd, R. G. (1981), "Selectivity of Sources: Reporting the Marijuana Controversy," *Journal of Communication* 31(2): 129-137.
- Takahashi, B. (2011), Framing and Sources: A Study of Mass Media Coverage of Climate Change in Peru during the V ALCU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20(4): 543.

The Problems of Science Communic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Mad Cow Disease” Controversy

Youn, Sugmin* and Cho, Kyung Min**

This study considers the aspects of science communication in relation to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or MCD, Mad Cow Disease) risk and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swept away Korean society in 2008. To begin with, the BSE affair was fully described. The serious risks of U. S. Beef Import reported by ‘PD notebook’ became an issue, and millions of citizens, anxious about mad cow disease fears, gathered in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to denounce Lee Myungbak government for the erroneous decision. This study attempts to delineate the BSE affair objectively, along with salient events, governmental responses and the reactions of media and public. For understanding BSE phenomenon, this article set forth a science communication model that describes the flow of scientific information in our society. The scientific information is processed by communication nodes, including the ‘source’ who produces and communicates the scientific knowledge, the ‘mediator,’ ‘public,’ and the ‘scientific knowledge’ itself. Based on this, this paper discusses structural problems existing in science communication.

Keywords: science communication model, BSE risk, mad cow disease fear, candlelight demonstration, PD notebook, scientific knowledge

*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